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1591
----------	-------

발의연월일 : 2026. 9. 28.

발 의 자 : 송영길 · 모경중 · 이주희
서미화 · 임문영 · 박지원
허영 · 장종태 · 김영배
박정 · 강경숙 · 김태선
박성준 · 이수진 · 박선원
양부남 · 조경태 · 전용기
박주민 · 정일영 · 김의겸
맹성규 · 김준환 · 소병훈
임미애 · 이용우 · 황명선
박정현 · 유동수 · 백혜련
김태년 · 남인순 · 김영호
박균택 · 백승아 · 이언주
정청래 · 권향엽 · 민홍철
김용만 · 김준형 · 진성준
이훈기 · 김남준 · 민병덕
윤종균 · 노종면 · 문대림
김윤 · 허종식 · 이용선
최혁진 · 김용민 · 김준혁
주철현 · 문진석 · 송옥주
박해철 · 김현정 · 이개호
이정현 · 황정아 · 이상식
문금주 · 복기왕 · 김성범

김남국 · 부승찬 · 김남근
박지원 · 윤건영 · 김주영
우원식 · 이재강 · 한정애
천준호 · 홍기원 · 박지혜
김기표 · 김병주 · 전은수
송재봉 · 이인영 · 김동아
박용갑 · 조인철 · 임오경
이해식 의원(88인)

주 문

대한민국이 과거의 분단과 갈등을 극복하고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역사적 주연으로 나아가는 길은 한반도에서 70년 넘게 이어진 전쟁의 불안을 완전히 걷어내고 영구적인 평화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기틀이 되며, 한민족의 통일 독립은 세계 평화를 완성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강조하셨다. 대한민국 국회는 겨레를 향한 숭고한 뜻과 유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한반도의 미완의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구조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연방하원 소속 의원 52명이 지지 서명한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1841)’에 대해 강력한 연대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본 법안이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와 관계정상화를 뒷받침할 가장 확실한 초당적 입법 명분이자 제도적 안전장치임을 확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미 관계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간절히 염원해 온 8천만 한민족의 희망에 부응하여,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열렬히 환영하고 촉구한다. 비록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 전략적 견제와 언사들이 존재하나, 이는 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북한 측의 전략적 레버리지로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남북미 관계정상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단이야말로 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뜨릴 결정적 기회임을 천명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11월 중국 선전 APEC 계기 회담, 베이징 회담, 2019년 6월의 역사를 재현할 판문점 회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 등 예상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지지한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워싱턴 답방으로 이어져,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워싱턴-평양 간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북미 수교의 역사적 결실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추진하는 ‘미 시민권자 이산가족·민간교류 평화방북단’의 성사를 적극 지지하고 성원한다. 수백여 명의 미주 동포 평화방북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및 북미정상회담에 동행하여 평화의 길을 응원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이산가족 상봉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의 민간 외교적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73년 넘게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 아래에서의 단순한 ‘위협 관리’나 ‘시한폭탄과의 공존’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지정학적 위협을 원천 제거하는 ‘영구적·구조적 평화(Structural Peace)’의 달성을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최종 목표로 재확인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외교부 및 주미대사관)가 미 연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법안(H.R.1841)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는 한편, 북미 대화 재개 및 KAPAC 평화방북단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방북을 위해 신속하고 정교한 초당적 외교·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안이유

첫째, 미 연방하원 '한반도 평화법안(H.R.1841)'의 초당적 지지 확대 및 북미 대화의 명분을 확보한다.

최근 미 연방하원 소속 펜실베이니아 17지구 크리스 들루지오(Chris Deluzio) 의원의 동참으로 '한반도 평화법안(H.R.1841)' 지지 서명이 발의자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을 포함해 총 52명에 도달했음. 이는 미 하원 전체의 12%에 달하는 전례 없는 성과로, 미 의회 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향한 초당적 지지 기반이 확고히 구축되었음을 증명함. 이는 향후 재개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과감한 정상외교에 강력한 입법적·정치적 명분을 제공할 것임.

둘째, 북미정상회담 가시화에 따른 선제적 국회 연대 및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한다.

최근 미·북 간의 대화 재개 기류가 조금씩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결단력과 북한의 전략적 레버리지 활용이 맞물리는 지금이야말로 관계정상화를 위한 적기임. 11월 중국 선전 APEC, 베이징, 판문점,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평양 방문 등 그 장소가 어디이든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되어야 함. 나아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로 이어지는 구조적 평화의 틀을 완성해야 하며, 당사국인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견인할 필요성이 매우 큼.

셋째, KAPAC '미 시민권자 이산가족·민간교류 평화방북단'을 통한 민간 평화 외교의 지평을 확대한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수백여 명 규모의 '미 시민권자 이산가족·민간교류 평화방북단'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천륜이 끊긴 이산가족의 한을 풀고 남북미 간 인도적 신뢰를 회복할 유일무이한 기회임. 이들 평화방북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일정과 발맞추어 동행하는 것은 북미 대화를 측면 지원하고, 미국 조야에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을 확산시킬 최고의 민간 외교적 자산이 될 것임.

넷째, 영구적·구조적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과감한 외교적 역할을 촉구한다.

불안정한 정전협정 토대 위에서의 단순한 리스크 관리는 한계가 명확함. 과거 윤석열 정권 당시 주미대사관 등이 미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평화법안 반대를 로비했던 자해적 외교의 우를 바로잡고, 현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팀이 미 의회의 H.R.1841 법안 통과 지원 및 북미 대화 재개, 평화방북단 성사를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적 협력에 나서도록 강력한 국회 차원의 명분을 제공하고자 함.